헌재 심판 시기따라 조기 대선… 최단 2개월·최장 8개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尹, 심판 전 하야땐 내년 2월 대선
헌재 재판관 3석, 민주 2명·국힘 1명 연내에 임명동의안 처리키로

조기 대선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어 덩달아 대선 시기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인용을 가정해 유력한 조기 대선 가능 시나리오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가량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검경 수사의 칼날이 죄여오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이전에 하야하는 경우에 최단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에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재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야 가능성은 낮다. 또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일정을 점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2달(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빠를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진다.

헌재가 현 헌법재판관 임기를 고려해 내년 3월말까지 탄핵 판결을 완료하면 2달 뒤인 2025년 5월에 대선이 가능하고, 180일을 모두 채워 선고를 하면 내년 8월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헌재 심판이 일단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1년 가까이 심판절차가 멈춰 있다.

반면 헌재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법 51조가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헌법 상황이라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헌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나 변수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신자" vs "진범" 계파 갈등 일촉즉발

국힘 '한동훈 체제' 내홍 격화…주도권 다툼 속 비대위 전환

2년 9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넜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다시 '죽음의 계곡'에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분당 사태, 선거 연패 등으로 궤멸 상태에 내몰렸다가 2022년 '외부인' 윤 대통령을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린 모양새다.

당장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등 당 주류는 야권에 동조해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친한(친한동훈)계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민심을 외면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진범'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위기 수습과 대선 준비 등을 명분으로 주도권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8년 전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거취와 탄핵 찬반, 대통령 제명·출당 등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는 이미 극심한 갈등을 노출한 상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찬성 투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내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투표한 의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후 당 수습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친한계의 탄핵 찬성 드라이브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 87조·91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계파 갈등은 윤 대통령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상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선 잠룡' 민주 이재명 독주·국힘 안갯속

민주, 이대표 재판 변수…김동연·김경수·김부겸 주목
국힘, 한동훈 여론조사 앞서…오세훈·홍준표 대항마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여권의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도 싸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의 누구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쟁력이 있는 마땅한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지표 등을 볼 때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한 대표의 대권 도전에 중요한 변수는 윤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그리고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다.

한 대표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제명·출당까지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인 언행이 당내 주류인 영남·친윤(친윤석열)·중진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2대 국회 들어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도 한발 앞설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국정 분야별 비전 발굴에 착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독주 체제가 역으로 당내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이 속도를 내고 재차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 독주 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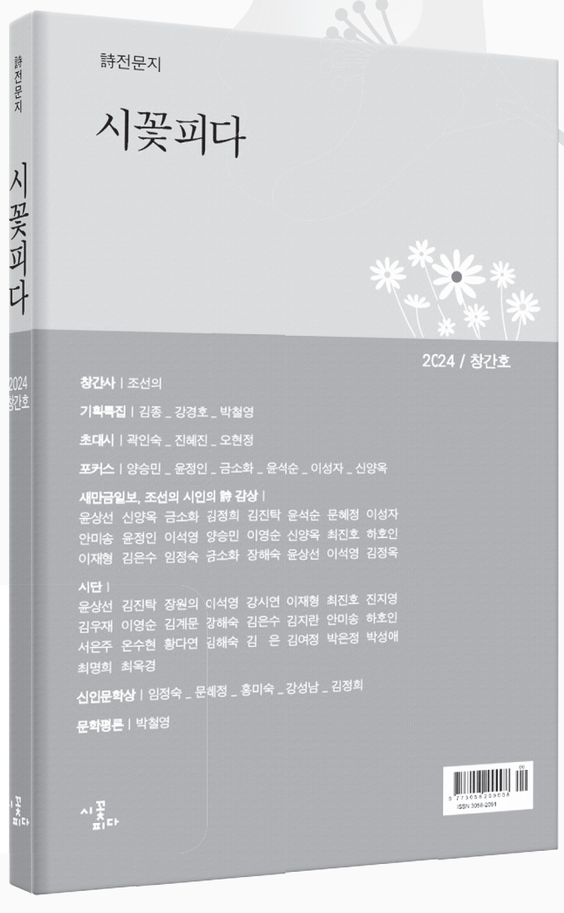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인사를 두루 영입해 이들 중 조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인 김 전 총리와 친문계 핵심인 김 전 지사도 비명계 구심점을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r·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